

# 에너지 전환시대의 동북아 협력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박주헌



지난달 우리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개원 31주년을 맞이해 '에너지패러다임 전환기의 동북아시아 국가의 에너지정책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중일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동북아 3국 모두 에너지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세계사적 흐름과 각국이 처한 독특한 상황을 조화시킬 수 있는 나름의 새로운 에너지믹스를 찾기 위해 암중모색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의 정책목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국내 대기오염의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탈석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원자력, 천연가스, 신재생의 확대는 오히려 탈석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된다. 반면,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악화된 에너지자립도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신재생을 확대함과 동시에 원자력의 과거 역할을 상당부분 회복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 과정에서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급증한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는 자연스럽게 비중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에너지 공급의 안전성 향상과 청정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비중을 확대하는 대신 원자력과 석탄을 대폭 줄이는 방향의 에너지전환을 계획 중이다.

모든 나라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적 에너지믹스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각국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현재의 에너지믹스뿐만 아니라 에너지자원의 여건, 국내 여론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중국에서 스모그를 비롯한 대기환경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이다. 따라서 그 동안 지나치게 의존했던 석탄을 줄이고, 국내에 막대한 매장량과 잠재량을 갖고 있는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은 너무도 당연해 보인다. 반면에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자원빈국으로서 2030년까지 25%의 에너지자립도를 목표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에너지정책에서 무엇보다 안전문제를 최우선시하고 있으며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이어진 장기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경제적 측면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과거에 비해 대폭 강화된 안전기준을 바탕으로 후쿠시마 원전사태 직후 제로 상태였던 원전 가동을 조금씩 재개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수입에 대부분 의존하는 화석에너지원의 역할 비중을 축소하는 것은 에너지자립도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미세먼지와 경주 지진으로 야기된 원전 안전성 이슈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원전과 석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과 천연가스 비중을 높이는 정책 방향을 잡은 것이다. 매우 자연스럽게 세계적 추세와도 맞는 정책 방향이다. 하지만, 경로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에너지믹스라는 점에서, 기저 전원을 담당하고 있는 원전과 석탄을 상대적으로 비싸고 변동성이 높은 천연가스와 간헐성의 약점을 갖는 신재생으로 대체할 수 있는 범위는 현재의 기술 수준과 지리적 여건을 고려할 때 제한적으로 보인다. 따라서 천연가스 수급을 좀 더 안정시킬 수 있는 도입선 다변화와 신재생의 간헐성을 완화할 수 있는 인접국과의 계통연결 등이 보완된다면 현재의 에너지전환정책이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보완책들은 모두 한중일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과의 에너지협력을 통해 가능한 일이라 하겠다.

최근 동북아 정세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중해지고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역내 협력의 필요성이 커진다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특히, 에너지는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만큼 보다 큰 외교적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앞으로도 한·중·일 간의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이 산업적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정부와 학계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어 역내 안보에도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